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 29.(목) 16시

유정복 인천시장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재외동포청의 입장

- 재외동포청은 2026년 1월 28일에 열린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천시 현안 관련 기자회견’ 중 우리 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입장을 알립니다.
- 수도권 소재 핵심기관 이전에 재외동포청이 포함?
 - 해당 사안은 주요 언론이 대부분 보도하였으나, 특정 매체에서만 재외동포청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어제(28일) 오전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국조실은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고,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재외동포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유정복 시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 우리 청은 인천을 떠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 문제가 되었던 최초 기사에서 김경협 청장의 일부 발언이 ‘광화문 이전 검토’라는 제목으로 출고된 직후 해당 매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수정하였고, 기사와 영상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김 청장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 청은 임대료 인상 통보를 기점으로 그간 누적되어 온 동포들의

접근성에 대한 불만을 분석하였고, 송도보다 여건이 나은 곳을 제시하며 인천시와 협의하였으나 인천시는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후 인천시가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전략과제에서 언급한 ‘재외동포청으로 이어지는 대중교통을 조속히 확충해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높인다’를 비롯해 재외동포들을 위해 선언했던 공식·비공식 약속을 바탕으로 정리한 네 가지의 대책 수용을 전제로 인천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안타깝게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의 편의 개선과 안정적인 청사 마련에 협조해달라는 재외동포청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채 개인 SNS에 이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개인의 능력을 운운하며 재외동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 우리 청은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편과 불안 속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사천시도 중앙부처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가 700만 재외동포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이 제시한 전제 조건에 대해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박병규 (032-585-3107)
		담당자	사무관	박한울 (032-585-3246)